



사드 배치,
새 정부가 결정
하게 해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당국이 저지른 불법성을 바로 잡아야

» 주한미군 사드 배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고 한국이 사드 부지(수십만 평) 제공과 비용(수천억 원~수조 원) 부담의 의무를 지는 것은 한미 간 조약 체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조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근거로 내세우는 (기관 간) 약정은 실체가 없으며,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될 수 없어

박근혜 전 정권은 한미 간 약정(?)을 체결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조약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될 수 없습니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또 다른 어떤 비밀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불법성을 파헤치고 한미 합의(?)의 실체부터 밝혀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당국이 자행한 불법성을 파헤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받기 위해서도 먼저 한미 합의(?)의 실체부터 밝혀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내법과 절차를 위반한 사드 배치 공사 중단 명령부터 내려야!

더욱이 외교부의 사드 부지 제공이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의 사드 부지 공사도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불법으로 점철된 한미 당국의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도입을 즉각 중단시키고 배치된 사드 장비를 철거시켜야 합니다.

불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와 부지 공여!

문재인 정부는 부지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배치된 사드 장비를 철거시켜야 합니다!



사드장비 반입하며 웃는 미군들(2017.4.26)



트럼프 대통령의 뻔뻔하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 구매 비용 10억 달러(1조 1,600억 원) 청구

- »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 장비는 한국군 소유가 아니라 주한미군 소유입니다.
- » 미군이 소유한 장비 구매 비용을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미 소파 5조를 위반한 불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 » 10억 달러의 장비 비용 말고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은 사드 부지 비용(800억 원 이상)과 기반시설 구축비와 운영유지비(터키 기준 20년간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등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대가는 중국의 사드 부지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으로 우리의 안보가 결정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무시 못 할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롯데 매출 손실액이 3월~4월 사이
5,000억 원에 달해” (2017.5.5, JTBC)

안보위협! 주권침해! 경제타격! 사드 배치 철회해야!